

의정소식

구민 복리 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심 없이 발로 뛰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식부리축제(정응환, 2019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5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08 주요의정활동
제186회 임시회
제187회 임시회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189회 임시회
- 12 주요 안건처리 현황
- 17 현장 속으로
- 24 결의안,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 36 2020년 상반기 포토 의정



표지설명 | 정자향 풍경
(김택수, 2019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발행일 | 2020년 상반기, 제24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3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대화와 소통을 기본으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들의 다채로운 의견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임채오입니다.

2018년 제7대 전반기 출범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의 시작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간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전반기 의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온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북구의회의 앞에는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역사문화벨트 조성, 도시 인프라 조성 및 공공시설 확충, 양정염포 배면도로 등 주요사업 과제가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이런 숙원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대의기관으로서 협치를 통해 제 역할을 충실히 하려 합니다.

대화와 소통을 기본으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들의 다채로운 의견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만 구민들이 북구의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을 살피는 데 있어 지역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협약해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는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 기반을 두되, 견제와 감시 기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북구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최적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적극 교류하고, 서로 힘을 합해 오로지 구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그만큼 성장 가능성과 희망이 큼니다.

지역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선배시민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탁월한 분별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북구의회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반기 북구의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임 채 오

제7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장



성명 임채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구민이 최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의장



성명 이정민
연락처 010-3123-3387
선거구 농소 2·3동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북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명 이진복
연락처 010-4228-8986
선거구 비례대표

구민의 이익을 지키며, 겸손하고 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원



성명 이주언
연락처 010-9173-443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든든한 의정활동을 펼쳐 기본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명 정치락
연락처 010-3863-8980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정치꾼이 아닌 이웃을 위한 구의원으로서 단디 하겠습니다.

의원



성명 정외경
연락처 010-6625-7725
선거구 농소 2·3동

초심, 열심, 지심으로 더 많은 행복을 만드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성명 임수필
연락처 010-6227-0049
선거구 농소 2·3동

노동자 서민의 직접 참여정치가 희망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명 백현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늘 그랬듯이 이웃 같은 구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8	2	3	2	1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 7. 1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18. 7. 1. ~ 2022. 6. 30.
- 2020. 1.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20. 4.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의회 조직





회기운영 현황(2020. 1. 1. ~ 6. 30.)

구 분	계		임 시 회		정 령 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2020년 상반기	4	43	3	28	1	15

안건처리 현황

회 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86회 (2020.2.17.~2.28.)	12	10	0	0	3	0	0	1	0	2	4
제187회 (2020.4.20.~5. 4.)	15	23	1	0	11	1	0	0	0	2	8
제188회 (2020.6.10.~6.24.)	15	26	1	1	11	1	2	0	1	1	8
제189회 (2020.6.26.)	1	4	0	0	0	0	0	0	0	0	4
합 계	43	63	2	1	25	2	2	1	1	5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86회 || 임시회 2020. 2. 17. ~ 2. 28. (12일간)

울산북구의회가 2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올해 첫 임시회인 제186회 임시회 개최식을 갖고 같은달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18일부터 26일까지는 각 부서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27일에는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주언 전반기 의장은 첫날 개최식에서 “결산검사는 지난해 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사, 분석하는 중요 절차이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은 구 예산이 적정 집행됐는지 세심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운영위원장이었던 임채오 후반기 의장은 ‘역사는 곧 북구의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임 의장은 “호국문화유산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와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관련 기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역사문화벨트 사업과도 연계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87회 || 임시회 2020. 4. 20. ~ 5. 4. (15일간)

울산북구의회가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제187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다뤘다.

제1회 추경안에는 방역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과 같이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등 총 531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임시회 이틀째인 21일에는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여 개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주언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각종 세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임수필 의원이 ‘코로나19의 위기 북구주민 힘 모아 이겨 냅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북구의회와 북구청이 앞장서서 북구 주민과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88회 || 제1차 정례회 2020. 6. 10. ~ 6. 24. (15일간)

울산북구의회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올해 첫 정례회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주언 전반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집단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께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현조 전반기 부의장은 첫날 본회의 말미에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처리결과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구정질문에 나섰다.

백 전 부의장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 가능한지를 묻고, 북구청이 지난해와 달리 청원을 수용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동권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10여년 이상 갈등 상황을 이어가는 것은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청원을 두 차례 채택한 점도 감안했으며 주민과 중소기업인들의 청원 서명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의회에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이 건으로 지역사회의 분열이 지속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임수필 의원은 같은날 ‘월성핵쓰레기 임시저장소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성사는 주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89회 || 임시회 2020. 6. 26. (1일간)

울산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임채오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으로는 미래통합당 이정민 의원이 선출돼 2년간 북구의회를 이끌게 됐다.

북구의회는 6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18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7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치렀다.

의장 선거에는 임채오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전체 의원 8명 모두의 표를 받아 당선됐다.

임채오 신임 의장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자동차산업 부진, 고용 불안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치른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정민 의원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민 신임 부의장은 “구민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펼쳐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면서 “열린 자세로 동료의원 간에 화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의원들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전반기를 이끌어 온 이주언 전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야가 의장, 부의장을 나눠 맡으면서 협치의 기초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새로 출범하는 후반기 북구의회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186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신천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물 및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유사한 기능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적·회피조항을 보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187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이진복의원 외 3명]

*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조작이 간편한 방연마스크 비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들의 생명 보호 및 신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에 따른 국장급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회계 전담 기구 신설, 정부 부처 공모사업 대응, 아동학대 조사, 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을 강화하는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임.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브랜드슬로건, 캐릭터)이 새로이 개발됨에 따라, 구 상징 공식 도시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징물 활용 및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와 인증기의 확대보급 및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등으로,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자녀가정’에 관한 자치법규의 통일된 정의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개방화장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정비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 근거 마련하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고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 의견청취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윤종오 전 복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 채택

* 윤종오 전 복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등 납부대상 금액 중 채권회수액, 기납부액을 제외한 잔액 모두를 면제해달라는 청원임.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정민의원 외 2명]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예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조문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임수필의원 외 1명]

* 상위법령 개정예에 따라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직원 복지 증진 및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해 보육휴가 및 자기계발휴가 조항 신설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지역 관광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여가 및 휴양문화 공간으로 캠핑장이 조성됨에 따라, 캠핑장의 쾌적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용어 일치 및 개정사항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초등학교 등에게 적절한 돌봄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2019. 6. 14.)」에 따라 돌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구조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구성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확대 및 수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채권면제 동의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채택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이 채택되어 이송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의안을 제출함.

●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이진복의원]

*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수요 증가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기본등분포화중이 5%미만의 경미한 용도변경과 구조 변경이 없는 단층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구조안전확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함.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 운행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이주언의원 외 7명]

* 부산~울산~경주~포항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동해남부권의 생활, 경제, 관광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주는 중요한 사업이며, 송정역 연장 운영을 위한 송정역 광역전철역 건립 및 추가 차량구입비 등 관련기관에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내년 부산~울산 개통에 맞추어 반드시 광역전철이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촉구함.

제189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북구아동의회 “의회 의정활동 배웠어요”



울산 북구 아동의회가 1월 14일 북구의회를 찾아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활동은 북구가 이날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아동의원의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아동의회 워크숍'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20여명의 아동의원들은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의회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본회의장을 둘러봤다.

북구의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조례 제정, 예산안 의결 등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등 평소 북구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들었다.

아동의회 이채민 의장은 “아동의회에 참가하면서 실제 의원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의회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이주언 전반기 의장은 “미래 희망인 아동의원들의 신선한 질의를 듣고 답변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며 “아동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북구의회에서도 진지하게 분석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 앞 복지시설 위문활동



울산북구의회가 설을 앞두고 관심과 온정을 필요로 하는 지역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다.

북구의회 의원 일동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1월 21일 북구지역 복지시설 2곳을 찾아 격려 성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북구의회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진행하는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활동의 하나다.

먼저 연암동 상방로에 위치한 ‘우리들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을 위한 쌀과 물티슈 등의 생필품과 함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전달했다.

이어 연암동 두부곡1길 소재 울산현대요양원을 찾아 화장지와 세제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했다.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은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전달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모든 주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현장방문



울산북구의회가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점검과 비상근무자 격려에 나섰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북구 주민들을 위한 감염 확산 대책을 점검하고,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먼저 1월 24일부터 북구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찾아 감염병 예방 대책을 듣고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담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울산공항에서 발열 감시 카메라를 운용 중인 북구청 비상근무 담당자들을 만나 감시 기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대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언 전반기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민들께서도 수칙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와 무분별한 거짓 뉴스 및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 긴급간담회 개최



울산북구의회가 제18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 당초 계획했던 현장방문 활동 대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매곡천 친수환경 및 경관조명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북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우려가 한층 커짐에 따라 긴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활동상황을 청취하고, 확진자 등 피해 상황과 열화상 카메라 운영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졌다.

의원들은 코로나19 세부 대응사항과 북구지역 행사 연기사항 등을 점검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북구지역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적극 강조했다.

특히 감염 예방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구의회는 또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울산공항-호계역 발열 감시 카메라 운용 현장에서 비상 근무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해 격려 물품도 전달했다.

이주언 전반기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회에서도 이를 감안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서류로 대거 변경하는 등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전달



울산북구의회가 대구, 경북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3월 12일 의장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 계좌로 송금했다.

대구·경북 지원을 위해 전국적인 성금 전달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지역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성금 전달에 나선 것이다.

성금은 3월 9일부터 이날까지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모은 것으로 약 200만원 규모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지역의 취약계층 지원과 환자 치료 및 의료진 방호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북구의회 구성원들이 마음을 한 데 모았다.

이주언 전반기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정당과 의원, 공무원 구분 없이 모두가 한 뜻으로 힘을 모았다”면서 “감염병 퇴치를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북구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확산 예방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북구청과 자생단체가 주관하는 방역 현장에 적극 동참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체적인 거리 방역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북구지역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울산공항·호계역 발열 감시 카메라 운용 현장에서 비상근무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한 격려 물품도 전달했다.

법제처 초빙 ‘맞춤형 자치법제’ 교육



울산북구의회가 자치법규 품격 향상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 법률전문가를 초빙, 자치법제 교육을 진행했다.

북구의회는 3월 18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맞춤형 자치법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진행 중인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사업에 의거한 것이다. 이 사업은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집행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제처 조정필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 해석 정비 방향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 여부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자치법규 진행시 쟁점사항 및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강연했다.

조 협력관은 자치입법의 기본원칙,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등에 대해 판결 및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이주언 전반기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단체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법제처에서 직접 찾아와 알찬 내용의 교육을 펼쳐줬다”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와 판례를 접하면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으로 7대 전반기 마무리



울산북구의회가 제7대 전반기를 자원봉사활동으로 마무리했다.

북구의회 의원 8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6월 30일 북구 천곡천 일대를 찾아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제7대 개원 2주년을 맞아 전반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후반기 원 구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의회 구성원들은 잡풀이 무성한 풀숲을 헤치고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이주언 전반기 의장은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수시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소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에 나선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 발 의 자 : 이진복 의원
- 의 결 일 : 제188회 제1차 정례회(2020. 6. 24.)
- 결의요지 :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 제안이유

가.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수요 증가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임.

나.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기본등분포괄하중이 5%미만의 경미한 용도변경과 구조 변경이 없는 단층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구조안전확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함.

■ 주 문

현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동법 제48조(구조내력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신축 및 증축에 준하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하여 용도변경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지 않고 오히려 건축물 용도별 평균하중이 줄어드는 용도변경까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포항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구조안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이 즐비한 상황으로 시공업자의 안전불감증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강화가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건축행위나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지금은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과도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을 통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규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경주의 황리단길과 같은 골목재생 사업과 정부가 역점을 두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이 활성화 되고 민생안정을 불러올 수 있도록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로 인한 오래된 건축물의 공실 증가를 막고 건축물 용도변경 수요 증가로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대한건축협회의 질의회신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등분포괄하중이 5%미만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 없이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는 건축물의 경미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수요 증가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하나,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기본등분포괄하중이 5%미만의 경미한 용도변경과 구조 변경이 없는 단층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구조안전확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한다.



- 발 의 자 : 이주언 의원
- 의 결 일 : 제188회 제1차 정례회(2020. 6. 24.)
- 결의요지 :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 가. 부산~울산~경주~포항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동해남부권의 생활, 경제, 관광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주는 중요한 사업임.
- 나. 송정역 연장 운행을 위한 송정역 광역전철역 건립 및 추가 차량구입비 등 관련기관에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 바람.
- 다. 내년 부산~울산 개통에 맞추어 반드시 광역전철이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되어야 함을 울산 북구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촉구함.

■ 주 문

우리 북구의회는 2019년 2월 제18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 연장운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다. 이용 인구가 많고 향후 북구 유일의 역사가 되는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 편의를 증진하여 주는 것이며, 나아가 동해남부지역을 광역 벨트로 묶어 주는 중대한 사업의 일환일 것이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부산~울산 구간은 사업 막바지에 있으며, 울산~신경주~포항 구간은 총 8공구, 76.5km로서 일부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시속250km의 준고속 신형열차(EMU250)와 전철 개념의 전동차 투입을 통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 즉 부산과 해오름동맹은 1시간 생활권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동해남부지역의 무궁한 관광자원을 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으며, 생활과 경제의 공동체 형성 및 권역 성장의 발전의 기틀이 되며, 더 나아가 동해남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울산시가 실시한 수요 예측 조사 결과 전체 수요 중 울산 태화강역과 송정역 구간이 78%를 차지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송정역 주변은 광역

전철의 수요가 높고 향후 동해남부지역 관광벨트 및 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해남부선 복선철로를 따라 울산과 부산을 오가는 광역전철이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에 있으나 종착역이 태화강역으로 송정역 공사 마무리 단계에 광역전철 연장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송정역 반경 10킬로미터 안의 인구가 47만명을 넘어섰고 현재 송정·매곡·울동·강동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개발로 10만여명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전철 연장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재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72,574명의 집단민원이 제기 되어 있으며, 광역전철역 건설비(108억), 추가 운행에 필요한 차량 2대구입비(104억), 연간 추가 운영비(17.5억)에 대하여 여러 관련기관이 재정 부담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구 주민, 더 나아가 동해남부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을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하나, 부산~울산~경주~포항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동해남부권의 생활·경제·관광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나, 이를 위하여 부산~울산 광역전철 개통과 맞추어 송정역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는 제반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부산~울산 개통에 맞추어 반드시 광역전철이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되어야 함을 울산 북구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 질문의원 : 백현조 의원
- 질문일시 : 제188회 제1차 정례회(2020. 6. 10.)
- 질문요지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Q.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금 등 면제 청원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판단되는데 청원을 통해 면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와 면제한다면 어떤 방법에 의하여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2018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회신한 지방자치단체 채권 면제와 관련한 법령해석에 따르면, “구상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라고 하여 다른 금전 채권과 법적 성격이 다르거나 채무 면제를 위한 법률상 요건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본 구상금 채권도 다른 채권과 같은 법률상 요건으로 청원을 통해 면제가능하다는 점을 회신하였고 그 방법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면제하여 달라는 주민의 청원을 의결로 채택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와 같은 의회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청원을 이행, 즉 채권을 면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채권을 면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해석하였음을 답변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Q. 향후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동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된다면 구청장은 ‘소신행정’이라는 명분 아래 현행 법령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1, 2차 청원의 처리결과를 ‘수용불가’에서 ‘수용’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구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면 주민들이 앞으로 북구청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청원 처리결과를 종전과 다른 입장으로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동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된다면 구청장은 ‘소신행정’이라는 명분 아래 현행 법령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1, 2차 청원의 처리결과를 ‘수용

불가’에서 ‘수용’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구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면 주민들이 앞으로 북구청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청원 처리결과를 종전과 다른 입장으로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본 청원 처리결과를 종전과 다른 입장으로 표명한 이유는 2020년 5월 20일 제출한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통해 밝힌 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북구의회는 본 채권에 대한 면제 청원을 채택·이송하였고, 이송된 청원에 대해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 1월 9일 수용불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1일 북구의회는 본 채권에 대한 일부면제 청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결로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의회의 청원 채택이 구청장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본 채권과 개별사례는 다르지만 ‘1999년 12월 안양시 삼성7교 부실 시공에 따라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해 안양시 의회에서 2008년 10월 16일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이송하고 안양시에서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제출하여 2008년 12월 22일 안양시 의회에서 의결로 면제하였으며, 이어서 2011년 9월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있는 점, 2018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공문으로 요청한 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를 대표로한 27개 각종 단체들의 구상금 면제 결정에 대한 요구가 2018년

8월 13일 기자회견, 2018년 12월 17일 임시필의원의 단식농성, 2019년 1월 23일 결의대회, 2019년 6월 3일 윤종오 전 구청장의 복구청사 입구 천막농성 등을 통해 2년에 걸쳐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8년 8월 14일부터 여섯 번의 면담을 통해 2019년 6월 24일 상호합의에 이르게 되어 채무자는 모금을 통해 구상금 납부 의사를 밝히게 된 점, 윤종오 전 복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소송비용에 대하여 2018년 12월 21일 주민 11,256명이 서명하였고 이어 2020년 5월 1일 주민 190명이 서명하여 복구의회에 청원한 점, 2019년 6월 19일 김성보 복구의회 초대위원장, 박춘환 2대위원장, 김진영, 하인규 3대 의장 등 역대의장들이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해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를 밝힌 점, 대형마트 진입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반영되기도 하는 등 진지한 법 정책적 고려로 이어졌다는 점, 2019년 6월 24일 아파트 2차 경매기일 기준 채권회수 예상액 대비 최종 채권 회수액은 1천8백9만4천원정도 적은 상황이지만 윤종오 전 복구청장이 구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그 간 구상금 채권의 면제 요구를 둘러싼 논쟁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상처의 흔적을 남겼으므로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갈등 상황은 복구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 주민들의 화합을 토대로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복구”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하여 복구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을 존중하여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Q. 1차 청원 시 집행기관의 ‘수용불가’ 의사 표시 후 윤종오 전 복구청장은 주민 모금을 통해 2019년 연말까지 구상금 및 소송비용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액 모금이 되지 않고 일부만 모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청원을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먼저, 2019년 6월 24일 윤종오 전 구청장이 제출한 이행연기특약신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구상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2019년 12월 30일까지 연기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기한연기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며 2차 청원을 수용한 이유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Q. 1차 청원 시 수용불가 공문을 보면, 기획홍보실 담당자가 기안하여 구청장 결재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번 2차 청원의 수용하겠다는 공문은 구청장 1인 결재로 통보되었는데, 윤종오 전 복구청장의 건축허가 반려건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1인 결재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와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적인 법적 책임을 현 구청장님이 전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 제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복구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윤종오 전 복구청장의 건축허가 반려 건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본 채권의 면제는 복구의회의 청원 채택에 따라 그 수용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Q.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항도 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속력을 잃게 되었는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구청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와 이번 사례를 통해 이와 유사한 청원들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집행기관인 자치구에 구청장을 두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먼저, 주민의 대의기관인 복구의회에서 청원의 채택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된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Q. 윤종오 전 복구청장의 구상금은 주민들의 적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충당한 사항이고 잘못된 행정을 한 윤종오 전 복구청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소신행정을 앞세워 현행 법령을 무시한 채 독불장군으로 작금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잘못도 없는 복구 주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 구상금 대위변제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행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구상금 잔여분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5월 20일 현재 본 채권 회수액은 1억4천5백만원으로 3억5천4백만원에

대한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제출한 바 북구의회 의결에 따라 본 채권의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북구의회에서는

그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 후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갈등상황은 북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 질문의원 : 임채오 의원
- 질문일시 : 2020. 3. 20.
- 질문요지 :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Q. 2020년도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염포전망대 조성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5개 구·군 총 국비 30억) 우리 구는 총 3건(생활기반분야 1건, 문화환경분야 2건) 국비 23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선정 결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국비 10억) 양정누리길 조성사업(국비 1.6억)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국비보조 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되며, 염포정상 경관개선사업의 미선정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나, 같은 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분야)에 우리 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국비 10억)이 선정되었다는 점이 심사 시, 국비지원 지역배분 차원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021년도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사업과 비교하여 개선 보완된 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아름다운 친환경 숲속전망정원 휴게공간 제공 : 염포 지역 동축산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등급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전망 위주의 2020년 사업계획과 대비하여 과도한 인공조형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적 숲속전망정원 형태의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청정 자연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파노라마 같은 경관자원과 입지여건 우수성 피력 : 사업 위치 정상은 울산12경인 울산대교와 울산 3대 공단(현대

자동차, 석유화학공단, 현대중공업 조선소), 태화강국가정원, 태화강 본류와 청정지역 동해안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우수한 경관자원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장점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 위치가 기존의 임도와 염포 누리길 등 등산로 코스가 만나는 지점으로 이용객이 많으므로, 이러한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면 사업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피력하고, '누리길 걷기대회', '울트라래리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등 여러 행사 개최를 통하여 염포동 주민들의 쉼터이용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들까지 염포동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침체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는 파급효과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 발언일시 : 제186회 임시회(2020. 2. 17.)
- 발언요지 : 역사는 곧 복구의 미래입니다!



역사는 곧 복구의 미래입니다!

현재 복구청은 7개반 49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전담반 운영과 136명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는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심한 방역 대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미래를 짐작하는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그 도시가 품고 있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북구지역은 삼한시대부터 철광석과 토철을 캔 곳으로, 중국의 고서인 후한서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한, 예, 왜가 이곳에서 철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구는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동북아 철기문명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달천철장이 2003년 4월 24일 시지정 기념물 제40호 지정이후 이동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달천철장 유적공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중한 북구 철의 역사를 영상물과 실제 모형을 통해 철을 수집하고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북구의 임란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1592년 4월 13일 17만 여명의 일본군은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여 부산포를 침략하고 4월 14일에 부산진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일본군은 이어서 동래성을 4월 15일에 점령하였습니다. 순차적으로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3진으로 나누어 북쪽으로 침략하였습니다.

울산에는 4월 19일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이 언양을 점령하였으며 경상좌병영을 비롯해 울산 지역을 점령하고, 21일 경주로 북상하였습니다. 왜적이 길을 셋으로 나누어 한꺼번에 진격함에 군과 민이 놀라 흩어져 여러 고을들이 무너져 막아내지 못하고 울산은 왜적에게 점령되었습니다. 우리 북구 선조들은 의병을 결집하여 일본군이 주둔한 병영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북구는 울산의 임진왜란 전쟁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투가 행해졌던 지역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대응태세, 의병의 창 의 과정 및 전투방식, 일본군의 행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흔적들이 북구 전역에 남아있습니다.

북구 지역의 임란사를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이 2017년에 있었습니다.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기박산성 의병결진과 임란사'를 주제로 다루었고 학술적인 접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토론회과정에서 풀지 못한 많은 역사적 의문들이 남겨졌습니다.

초기 의병 창 의 후 주둔했던 함월산성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 울산지역 의병들에 의한 싸움으로는 시초가 되었던 병영성 기습작전의 전투방식, 병영성 공격 이후 왜 병영성에 주둔하지 않고 다시 무룡산중으로 돌아왔는지, 달천전투를 비롯한 무룡산중에서 전개된 전투양상, 민의 군대조직 이후 기박산성 의병지휘부와 효문산성 지휘부 간의 무룡산지형을 이용한 공조전략전술 등 2017년 학술심포지엄에 참고되었던 『제월당실기』를 비롯하여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송호유집』을 함께 재조명하는 2차 학술심포지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기류 자료들에 나타나고 있는 과장되거나 윤색된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섬세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임진왜란 역사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소중한 우리나라 역사자료이듯이 우리 북구의 『이경연실기』와 『송호유집』은 울산 · 경주 중심의 의병들의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임란일기로 북구 임란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난 학술심포지엄에 참고되지 않았던 『송호유집』은 문중 책장 속에 오랜 세월동안 묻혀 있다가 경상좌도의 임란일기로 평가되어 한국국학진흥원의 협조로 국역편찬되었으며 2017년 1월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우리 구의 호국문화유산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관련 기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역사문화벨트 사업과도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

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전투에 참여한 우리 지역 호국문중의 공로와 신충사를 중심으로 한 승병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서 동물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실 세계에 온전히 적응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현실 세계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 너머를 보려고하고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며,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상상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현실 너머의 미지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뉴잉글랜드는 하버드대학을 비롯하여 예일·브라운·매사추세츠공과대학 등의 유명한 대학이 있는 지역입니다. '언덕위의 도시'를 건립하고자 1630년 아벨라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영국의 부당한 조세 정책에 반대하는 보스턴차사건을 시작으로 독립선언문까지 신대륙에서 독자적으로 세운 역사가 뉴잉글랜드의 현재를 예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동권 종합개발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농소~외동 간 도로, 중산동 이화산업단지와 더불어 북구임란역사의 새로운 한 줄로 호국역사를 품은 미래 융합도시 북구가 되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86회 임시회(2020. 2. 27.)
- 발언요지 : 북구주민은 고준위핵쓰레기장 임시저장소 건설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북구주민은 고준위핵쓰레기장 임시저장소 건설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은 인권이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가적 위기상황에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주요 예방용품 등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돌봄 대책과 영세 상인들의 지원대책,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과 생산 현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이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자발적 시민들의 위생관리 또한 필요한 때입니다.

북구주민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주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핵발전소와 고준위핵발전소 임시저장소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주민들에게 불안과 시련을 주지만 백신이 개발되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핵발전소의 중대한 사고는 세대를 두고 가혹하고 모든 희망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 위기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울산 북구주민은 핵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안전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핵발전소 6개를 북구주변에 끼안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주민들에게는 월성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어떠한 안전대책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발전소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북구주민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도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피해가 북구주민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북구주민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침묵을 강요 당했고 현재에도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20km안에 22만 명이 거주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인권이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 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금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핵발전소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똑똑히 보았고, 2016년 지진 5.8의 공포는 더 이상 이곳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구주민들이 안전할 권리를 찾는 것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북구주민은 더 이상 40년 전의 주민이 아닙니다. 국가 정책이라고 묵묵히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침묵의 결과는 계속해서 핵발전소 6개가 지어졌고 안정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북구주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는 그 누가 북구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북구주민들에게 또다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80년대 국가행정 방식으로 고준위 핵쓰레기장 임시저장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북구주민들이 분노합니다.

임시라는 명분으로 핵발전소 가동과 그로부터 얻는 수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쓰레기에 대한 최종 처분장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후대에 짐을 미루는 것은 양심을 가진 세대들이 못 할 짓입니다.

월성핵발전소 중대사고의 위험의 당사자는 북구주민입니다. 북구주민들은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20km안에 22만명이 살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경계구역 안에는 울산시민 115만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벗어난 곳에 북구주민을 위한 구호소나 대피소는 없습니다. 오롯이 울산시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주민투표요구 북구주민 청원을 11,483명이 하였습니다. 북구주민들이 핵쓰레기장임시저장소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해달라는 주민투표요구 청원 서명을 2월 19일 산자부와 청와대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장, 거리, 아파트, 식당, 성당과 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소중하게 적어낸 청원서입니다. 지금까지 불안을 느끼면서도 어느 누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가슴에만 품었던 좌절과 분노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북구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합니다. 핵발전소 위험성에 대해 몰랐던 시절에는 침묵하고 묵묵히 국가 정책에 미련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위험성을 알게 된

이상 침묵을 하는 것은 북구주민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북구주민을 배제하고 경주시민 일부만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안이 아니며 경주시민들이 북구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위험한 핵쓰레기임시저장소를 지을지 말지를 위험의 당사자인 북구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위원회,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북구주민들의 주민투표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울산 북구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렴해야 합니다.

다음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 면제 청원의 건이 미뤄진 것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위임받은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소개의원과의 논의도 없이 야합으로 처리하는 것에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요구를 개진하고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만 명이 넘는 주민청원이 지방의회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국회의원 특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회 곳곳에 남아 있는 의원들의 특권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명령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청원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접근하기 까다로운 규정을 둬으로써 주민들의 청원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소개의원이 있어야 하는 것과 문서로만 제출해야 되는 것, 청원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날짜 같은 것이 없으므로 인하여 의회가 방만하게 처리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법적인 기준을 넘어 다양한 애환과 억울함과 근심-걱정을 가까이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와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법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청원할 권리와 결정할 권리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의견충돌로 인한 표의 유불리를 계산하기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절박한 주민청원이 우선 되어야 하며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노력해온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울들의 연대”의 노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87회 임시회(2020. 4. 20.)
- 발언요지 : 코로나19의 위기 복구주민 힘 모아 이겨 냅시다.



코로나19의 위기 복구주민 힘 모아 이겨 냅시다.

최근 정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엄두도 못 낼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춧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이 국가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란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보살펴 줘야 한다는 것이며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차디찬 물속에서 힘들게 사라진 단원과 학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임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난시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민주노총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흔들며 미국처럼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재벌과 정당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들의 의료체계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진단 검사비만 400만원이 넘고 국민의 1/4이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상태에 대책 없이 패닉상태에 빠진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대응을 놓고 싸우는 대통령과 주지사간의 의견 충돌과 국경을 닫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자동차와 노동자의 도시인 북구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항구를 봉쇄하고 하역이 안 되고 선적이 되지 않아 수출 선적 부두에 빈 배 여러 대가 떠 있습니다.

생산하고 판매되어야 하는 세계 경제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현대자동차 수출 주력인 5공장에는 주문이 취소되어 휴업 일정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이후 최악의 상태로 나빠져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에 현대자동차는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악몽이 지금까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늘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삶을 변화시켰듯이 그 영향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태풍처럼 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울산 복구주민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복구의 예산은 넉넉하지 않아 코로나19가 없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부족하지만 합니다. 재난 시 중요하고 목직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행사성 예산은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의지와 사업 및 행사 담당 주관 부서, 그리고 지역 주관 단체 간의 양해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어하는 복구주민들의 삶의 곳곳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세우겠지만 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 중소 상인,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닙니다.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강사, 건설일용노동자, 청년, 노인, 학생, 엄마,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종사자 등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이 곁에 있음에도 모른체 행사를 치루거나 지급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의 모습입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올 해의 구청 살림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도 해외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지만 올 해는 자제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언론에도 나왔듯이 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 형편이 어렵다고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미담 사례를 우리 구에서 보았습니다. 농소3동 대동아파트와 벽산블루밍아파트 임대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북구주민들도 착한 임대료 낮추기 운동과 배려하는 실천에 적극 동참하려는 이 때 북구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북구의회와 북구청이 앞장서서 북구주민과 노동자들의 힘 모아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며 코로나19를 이겨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대응을 주목하고 따라 배우려는 모습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모범을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촛불로, 정권교체로, 코로나19 대응으로 그리고 이번 4.15총선에서 민족과 국민의 정의로운 시민의 힘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이정민 의원
- 발언일시 : 제187회 임시회(2020. 5. 4.)
- 발언요지 : 1차 추경을 마감하며



1차 추경을 마감하며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수가 10명 이하로 바이러스 확산 정점을 지나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생활방역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방역 및 각종 재난 대책 수립 ·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수가 10명 이하로 바이러스 확산 정점을 지나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생활방역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방역 및 각종 재난 대책 수립 ·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약 532억원이 증액된 4,26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당초 집행기관에서는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삭감한 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했지만, 증액된 532억원의 예산 중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1프로에 해당하는 11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111억원의 예산마저도 대부분 국비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대비책으로 타 시 · 군 · 구와 차별화된 대비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구 자체 사업을 만든다는 것이 재정여건 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나마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 위기속에서 우리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기대보다 못 미쳐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보다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 28일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은 우려와 공포에 떨었고,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는 일상을 크게 바꾸어놓았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울산의 주력업종인 자동차 · 조선, 석유 정제 및 화학제품 등에서 투자, 자금사정, 고용 등 전반에 걸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여파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율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에 닥친 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코로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항공, 호텔, 유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계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자들도 속출할 것이며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의 대비책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관내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몇 달간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의 위기에

몰린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창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페이 구매 동참 릴레이와 소상공인 응원 댓글 남기기 이벤트 등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적극 추진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추진 후 성과를 평가하고 언젠가 다시 또 있을지 모를 제2, 제3의 코로나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염병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위기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염병 위기가 갑자기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조직적 ·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으로 지방자치의 참의미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88회 제1차 정례회(2020. 6. 10.)
- 발언요지 : 월성핵쓰레기 임시저장소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성사는 주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월성핵쓰레기 임시저장소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성사는 주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주민투표 성사시키 주민의 위대한 승리를 얘기하기 전 몇 마디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권 구청장님이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지역사회 통합의 길로 가고자 하는 소신을 지지합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구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을 만큼 공개적인 논의 속에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구주민 절대다수와 노동자들도 지지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아직도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공세는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각 정당이 추가하는 정책과 소신으로 북구의 발전을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적폐로서 청산되어야 할 곳은 사법과 행정 · 외교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독점하고 핵발전소를 운영해 온 집단에도 있습니다. 행정과 기업, 언론, 권력이 결탁해 온 핵마피아라 부르는 집단은 철저히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착각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경주 월성핵발전소 앞에 상여를 끌고 집회를 하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 온 나라이에서 더 이상 희망도 없으니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

니다. 경주시를 포함한 감포, 양북, 양남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지원금과 세수를 먼저 생각합니다. 돈을 두고 나눠먹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있고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호소하면 너희들은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북구청도 모르게 비밀리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한 해수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동 어민들에게 진행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합리적 이성이 설 자리가 자꾸만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핵발전소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진심으로 보장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돈으로 매수·현혹하여 온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수원은 정직하고 양심적이지 못했습니다.

북구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북구의회는 결의안과 구청장과의 기자회견, 북구주민의 청원을 통해 북구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음에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문전박대와 외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 북구주민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박탈당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에서도 풀은 다시 일어납니다. 북구주민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핵발전과 관련된 시설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월성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라는 것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번 울산 북구 주민투표는 50,479명의 참여와 47,829명(94.8%)의 압도적 반대는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이며 주민을 무시해 온 정부와 산업통상부의 태도에 대한 저항이고 주민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투표가 아니라서 선거인명부, 예산, 인력, 투표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조건에서 22만명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이루어 낸 기적 같은 주민투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아쉽고 송구스런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북구주민들과의 만남과 투표의 결과를 보면서 북구주민들 마음속에 그동안의 부당함과 억울함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민투표 청원서명과 동의서명을 받으면서 주민들로부터 매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되겠냐'는

우려와 불신을 주민들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가가호호 방문 주민투표 동의 서명은 안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순간에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홍보와 서명운동에 '우리 아파트에는 왜 안 오느냐?', '아파트 게시판에 붙일 전단과 방송할 내용을 달라'는 요구가 매일 들어오면서 주민투표 참여 동의서명에 43,000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는 질문과 신분증이 없어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에 실망과 항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오시고 주민등록증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시는 주민들의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투표의 성사와 승리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위협 당사자 주민들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 민관기관에 위탁하여 모집한 549명의 시민참여단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협의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북구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재검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엉터리 공론화를 백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전 국민 공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고준위 핵쓰레기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및 핵발전소 관련 시설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투명성과 참여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가짜뉴스를 통한 왜곡된 정보가 아닌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북구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내서 한 표를 행사해 준 노부부 같은 북구주민들의 마음은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보내는 명령이며 책임지는 자세로 핵쓰레기 양산의 주범인 월성 2, 3, 4호기 조기 폐쇄까지 주장하고 앞장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와 한수원이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에 맞선 이번 북구의 주민투표 승리 뒤에는 주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울산과 전국 시민 단체의 연대가 있었으며 울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대로 이뤄낸 승리인 것입니다.



농소1동 새해공감토크 참가(20.01.06)



농소2동 새해공감토크 참가(20.01.07)

2020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0 PHOTO Council



농소3동 새해공감토크 참가(20.01.08)



농소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격려(20.01.09)

2020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0 PHOTO Council



북구신년인사회 참가(20.01.09)



강동동 새해공감토크 참가(20.01.10)

2020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0 PHOTO Council



효문동 새해공감토크 참가(20.01.13)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20.01.14)

2020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0 PHOTO Council



송정동 새해공감토크 참가(20.01.14)



양정동 새해공감토크 참가(20.01.16)

2020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0 PHOTO Council



염포동 현장점검 및 새해공감토크(20.01.17)



화봉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 축하(20.04.27)

2020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0 PHOTO Council



농소농협 주부대학 개강식 참가(20.05.14)



북구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 참가(20.05.26)



호계그린나래 청소년아동센터 개소식(20.06.09)



강동오토캠핑장 현장방문활동(20.06.23)



매곡천 현장방문활동(20.06.23)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 참가(20.06.30)

| 북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북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 서비스 내용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접속경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짝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09:00 ~ 18:00(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의회사무과(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73 팩스 : 241-8979

효문·양정·염포동	농소2·농소3동	비례대표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의 장	부위원장	운영위원장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임 채 오	이 정 민	이 진 복	이 주 언	정 치 락	정 외 경	임 수 필	백 현 조
의장실 : 241-8900 010-4844-5405	부의장실 : 241-8910 010-3123-3387	사무실 : 241-8920 010-4228-8986	사무실 : 241-8990 010-9173-4432	사무실 : 241-8960 010-3863-8980	사무실 : 241-8950 010-6625-7725	사무실 : 241-8930 010-6227-0049	사무실 : 241-8940 010-3801-836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 시대를 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